

2020년 초점

코로나19 대유행...‘잃어버린 1년’

■ ‘우한 폐렴’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지구촌 일상 ‘와르르’

2019년 마지막 날 중국 보건당국이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27건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2020년 지구촌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이 보고된 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다. 전파력이 강해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염병 앞에 세계 각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처음 인지한 때는 2019년 12월 31일이다.

WHO 중국지역사무소는 중국 우한 보건당국 홈페이지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에 관한 보도자료를 접했고, 로이터통신은 중국 보건당국이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27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초기에는 이 전염병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신종’ 감염병으로 확인됐다.

국가 간 이동이 많은 시대에 감염병은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졌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사상 여섯 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코로나19는 애초 폐렴으로 알려졌기에 ‘우한 폐렴’ 정도로 불렸으나, WHO는 2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월 3일 100만 명을 넘은 뒤 6월 27일 1천만 명대로 불어났다. 두 달여 만에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세계가 확진자 1천만 명에 놀라고 있을 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고 이는 곧 현실이 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1년 1월 26일 1억 명을 넘어섰다.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1개월 만이었다.

누적 확진자는 2019년 11월 9일 5천만 명을 넘긴 뒤 15일 안팎의 간격을 두고 1천만 명씩 증가했다.

세계은행(WB)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76억7천353만3천여 명인 것에 비춰보면 인류의 1.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는 214만8천여 명에 달했다.

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으로 미주대륙에서 4천384만3천여 명이 확진됐고 100만9천여 명이 숨졌다.

국제적십자사·적십월사연맹(IFRC)은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미주대륙에서 나왔다”면서 미주대륙이 ‘거대한 집단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인도로 1천67만7천여 명이 확진됐고, 15만3천여 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은 러시아(확진 373만8천여 명, 사망 6만9천여 명), 영국(확진 366만9천여 명, 사망 9만8천여 명), 프랑스(확진 305만7천여 명, 사망 7만3천여 명), 스페인(확진 263만7천여 명, 사망 5만6천여 명), 이탈리아(확진 247만5천여 명, 사망 8만6천

여 명), 터키(확진 243만5천여 명, 사망 2만5천여 명), 독일(확진 215만4천여 명, 사망 5만3천여 명) 순이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앞다퉀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의 이동 제한을 강제하면서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했다.

미국은 2009년 6월 시작한 역대 최악의 경기 확장기를 2월 마감했고 유로존 등 주요 경제권도 경기침체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현황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다.

각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중순부터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수조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등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면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곳곳에서 상충했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다수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개인의 이동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등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였지만, 비판과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국가 통제가 논란을 야기했다. 통행금지나 외출 자제령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와 구금, 최루가스나 실탄까지 발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은 주민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고 무인기와 감시카메라를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엄격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에서는 경찰이 균형을 곤봉으로 마구 때리며 해산시키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 국내선 1월 20일 첫 환자 발생··3차에 걸친 대유행

질병관리본부가 1월 20일 오후 "2020년 1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武漢)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습니다"라고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알렸다.

국내 첫 확진자는 대한민국의 출입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왔다.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검사를 한 결과 다음 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한 달간 우한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온 입국자와 이들의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28명이 감염됐다.

중국이 우한으로 오가는 교통편을 취소하자 우리 정부는 전 세계를 투입해 우한 교민을 데려왔다. 1월 31일 1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368명은 아산과 진천 등에 14일간 분산 격리 후 퇴소했다.

정부는 이후 우한 전세기를 2차례 더 투입하고,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이송했다.

국내 상황은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변했다.

한 자릿수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월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늘어나다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1만774명 감염)으로 분류되는 시기다.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의료진이 감염되는 등 의료 붕괴 직전에 몰리자 정부는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3월 들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검사 및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서 1차 대유행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한번 불붙은 감염의 불씨는 콜센터,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곳곳에서 번져갔다.

5월 초 이태원 클럽과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랐으나 유행 수준으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었다.

잠시나마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맹렬해진 것은 8월 중순이었다.

8·15 광복절 도심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두 축으로 확진자가 속출했고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도 20%를 웃돌았다. 이때가 '2차 유행'(1만3천282명 감염) 시기다.

2차 유행 시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의료 대응체계가 마져 흔들렸다.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었고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넉넉지 않아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다. 8월 말부터는 사망자가 거의 매일같이 나왔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고,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까지 내놓았다.

다행히 10월 들어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 방역' 수준으로 낮췄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유리한 겨울철을 앞둔 상황에서 사

람들의 방역 경각심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3차 유행은 초기부터 여러모로 방역 대응이 쉽지 않았다.

앞선 1·2차 유행은 특정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했지만, 3차 유행은 가족·지인모임, 직장, 학교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유행을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바이러스가 취약시설로 번지면서 요양병원과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11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 약 1천200명이 확진됐다. 이는 국내 감염 사례 가운데 신천지(5천213명)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은 뼈아픈 '방역 실책'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2.5단계로 잇따라 올렸지만, 방역에 대한 사회적인 피로도가 높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2월 25일에는 1천2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대 일일 확진자 기록이 경신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후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만 4만 명, 사망자도 670여 명에 달했다.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앞서 1·2차 유행을 크게 뛰어넘었다. 3차 유행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다.

■ K-방역 주목·최신기술·거리두기로 방역 모범

국내에서는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1년간 약 7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경·지역 봉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배제하면서도 감염병 사태를 잘 관리해 'K-방역'으로 주목을 받았다.

K-방역은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고,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하는 이른바 '3T 전략'이 핵심이다.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QR 코드' 같은 새로운 진료 방식을 도입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병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를 막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식으로, 정부는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했으나 6월에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이어 11월에는 기존의 단계는 더 세분화해 5단계로 재정비했다.

하지만 가족·지인·직장·동창 등 일상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는 3차 유행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요양병원·시설 입

소자·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수도권 익명검사,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등의 대책을 추가했고, 3차 유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방역은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한 것을 두고 일부 서구 인사들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다고 비판한 것이 한 예다.

한국이 이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면서 비판은 잦아들었지만, 공동체 안전과 개인 자유가 상충할 때 절충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대목이다.

거리두기는 확진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대로 된 보상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민 계층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와 정부는 보상 제도에 착수했다.

■ 마스크·재택근무·온라인 수업이 일상

코로나19는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모든 국민이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정부는 11월 13일 버스와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수십 년 뒤에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도 코로나19로 일상화됐다. 교육 당국은 전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자 학생 보호를 위해 4월에 우선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계속 병행해야

했다. 초·중·고교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만큼이나 온라인 수업이 자연스러워졌다.

고3 수험생은 유독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 개학일인 3월 2일을 80일 넘겨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매일 등교할 수 없었고, 학원과 독서실이 집합금지대상이 돼 공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1학기 등교 수업이 연기되자 교육부는 당초 11월 19일로 계획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뒤인 12월 3일로 미뤘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은 역대 최소 인원인 49만3천여 명이 지원했으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시험 참가에 부담을 느낀 학생이 늘면서 42만 명가량만 응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재학생 사이에서도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로 중위권이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시전형 대학별 논술·면접 일정 등도 줄줄이 바뀌어 고3 학생들은 대학 지원전략을 짜기가 더욱 어려웠다.

비대면 수업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는 전 학년에서 나타나 교육계 내부에서는 완전한 수준의 등교수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비대면'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회식도 크게 줄었다. 예비부부는 결혼 날짜를 늦추고, 젊은 부부는 자녀계획을 미뤘다.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국외여행이 불가능했고, 3차 유행 이후에는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회동도 금지됐다.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 면회가 사실상 금지됐고,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챙기기도 힘들었다. 졸업식 등 일생의 중요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일쑤였다.

1년 넘게 이어진 감염병 사태로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악화됐다. 경력 상실이 길어지면 이들이 저임금 계층으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2020년에 구직 자체를 단념한 '취업포기자' 청년이 급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업이나 육아 등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쉬' 인구를 보면, 20대(41만5천 명)가 2019년 대비 25.2%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 당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개념인 확장실업률의 경우 청년층은 25.1%로, 전년 대비 2.2%포인트나 급증했다.

■ 초유의 위기에 한 해 네 차례 추경 편성

코로나19는 경제와 산업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20년 한 해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내려갔고 확산세가 계속된 2분기에도 -3.2%로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했다.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했던 탓이다.

3분기에는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2.1%로 반등했으나 내수 타격은 계속됐다.

4분기가 시작된 10월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돼 경기 조기 반등 기대도 나왔으나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전망은 다시 어두워졌다.

실질 GDP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부채 급증을 감수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큰 폭 내리는 저금리로 뒷받쳤다.

한은은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코로나 초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썼다.

정부는 이 밖에도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항공·중공업 등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가동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올라갔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천억원에 달했다.

■ 초스피드로 백신 개발...한국도 5종 도입

코로나19 유행과 동시에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임상시험에서 70~95%의 코로나19 예방효과를 보이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1월 개발에 들어가 5월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영국은 12월 2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했다.

백신 개발에 평균 10여 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광속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긴급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한 임시 허가를 말한다.

영국은 12월 8일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뒤를 이어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인도 등이 접종에 들어갔다.

한국은 글로벌 백신 제약사와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도입

하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구매 계약을 한 물량은 5천600만 명분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만 18세 이상에 2회 투여하는 제품이다. 영상 2~8도에서 6개월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임상시험에서 약 70%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안센의 백신은 1회 접종하는 제품으로 영상 2~8도에서 3개월간 유통·보관할 수 있고, 예방효과는 66% 정도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백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화이자의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된 '핵산 백신'이다. 총 2회 접종해야 하고, 보관 및 유통 조건이 까다로워서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방효과는 95%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핵산 백신으로, 총 2회 접종해야 하고 예방 효과는 94.1%다. 영하 20도에서 6개월, 영상 2~8도에서 30일간 보관할 수 있어 화이자보다 보관이 덜 까다롭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나 B형간염 예방접종 등에 사용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발 역사가 길어 안전성이 높고 섭씨 2~8도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2~3년으로 길다. 예방효과는 89.3%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 국민에 여러 번씩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을 입도선매하면서 '백신 민족주의', '개발국 이기주의' 논란이 일었다.

저소득 국가는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지 못하고 선진국의 공여에 기대야 하는 실정으로, 2021년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변이 바이러스 등장...코로나19 종식은 언제

나라 안팎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2020년 말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했다.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인류가 반격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생산·보급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견줘 더딘 데다 전파력이 훨씬 센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자 세계 각국은 다시금 영국 등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갔다.

우리 방역당국도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 활개를 칠 경우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외국 입국자 감시를 강화했다.

민주당, 4·15 총선 압승... 야권은 참패 후폭풍

■ 민주·시민, 21대 총선 180석 확보... '슈퍼 여당'의 탄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의 17석을 합쳐 총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텃밭인 호남을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에서 교두보를 굳건히 지키고 충청·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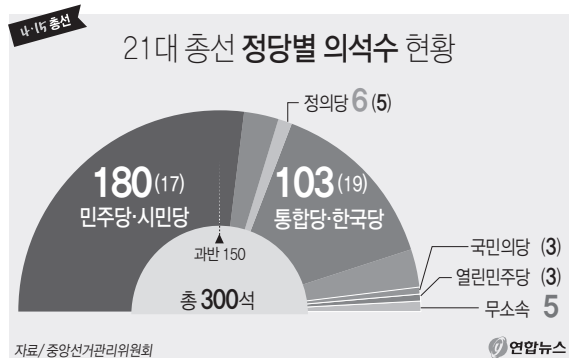
선거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은 '4연승' 기록을 세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성격의 총선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내세운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호소한 미래통합당에 대승함에 따라 집권 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개혁 입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지며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부각한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은 '민주정부 4기'를 출범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제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합쳐도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103석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강남과 서초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대구·경북(TK) 등 영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